

광주 골목상권 잡아먹는 식자재마트

대형마트 버금가는 규모 성업...매출 급감 영세상인들 폐업 고민 시, 현황 파악 제대로 안돼...조례로 개설 제동하는 대구시와 대조

“식자재마트 땀에 아주 죽었어. 손님 없는 것 좀 봐. 우리 시장 손님들은 식자재마트가 죄다 뺏어 갔잖아.”

지난 27일 오전 찾은 광주시 광산구 송정매일시장은 광산구의 대표 전통시장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한산한 모습이였다.

25년 간 송정시장에서 채소를 팔아온 김영숙(여·58)씨는 “2-3년전 근처에 들어선 식자재마트 때문에 매출이 절반 남게 사라졌다”며 “단골 손님들 발길도 끊겨 장사를 계속 해야하나 고민”이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비슷한 시간 송정매일시장에서 900여 m 떨어진 식자재마트 주차장은 마트를 찾은 차량들로 가득 차 있었다. 확찬 주차장을 관리하는 주차요원 2명도 차량 유도에 정신이 없었다. 이 곳을 포함해 송정매일시장 인근 도로 10분 거리에만 식자재마

트가 3곳이나 있다.

송정매일시장 상인들은 물론 송정시장 인근 주택가 과일가게, 소형점포, 빵집 등 영세상인들 역시 급격하게 줄어든 매출에 폐업을 고민중이다.

최근 광주 도심 곳곳에 우후죽순 격으로 들어선 식자재마트가 골목상권을 위협하고 있어 광주시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형마트에 버금 가는 규모를 보이는 식자재마트는 전통시장이나 대형마트에 비해 가격 경쟁력, 상품성에서 밀리지 않을 뿐더러 우수한 접근성을 무기로 손님을 끌어 모으고 있다.

28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3000㎡(907평) 이상 규모의 대형마트와 대기업 계열 점포인 SSM(기업형 슈퍼마켓)은 전통시장 반경 1km 내에 입점할 수 없으며, 한달에 두번 의무휴

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영업시간 제한으로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을 금지된다.

반면 최근 성업중인 식자재마트는 개인사업자 또는 도·소매업으로 등록돼 있고, 대형마트 면적 기준인 3000㎡도 초과하지 않는 탓에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업계에선 일반적으로 점포면적이 600㎡ 이상 -3000㎡ 미만 사이를 식자재마트로 부르고 있다.

전통시장과 영세업자들은 2000년대 초반 등장한 대형마트로부터 심각한 생존의 위협을 받다 그나마 생긴 규제로 숨통이 트였지만, 최근 식자재마트가 등장하면서 다시 존폐기로에 섰다며 울상이다.

광주에선 현재 유통산업발전법으로 입점 제한 등의 규제 대상인 대형마트는 13곳, 기업형 슈퍼마켓은 11곳이 영업 중이다. 하지만 식자재마트는 규제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현황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다.

업계 관계자를 따르면 광주도심에서 영업중인 대표적 식자재마트는 Y마트(영암마트), 다담, 농민유통센터, 이레, 한두레

등으로 200여 점포가 성업중이다. 이 중 1000㎡(302평) 이상의 면적과 하루 매출이 3000만 원대에 이르는 대형 점포만 30여 곳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높은 인지도를 가진 Y마트는 점포 수만 65곳에 이른다.

광주시는 식자재마트의 성업에 따른 영세상인 피해에 손을 놓고 있는 사이, 도시 규모가 비슷한 대구시는 2015년 전국 처음으로 조례를 통해 식자재마트 등 중대형마트 개설에 제동을 거는 등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대구시 ‘서민경제 특별진흥지구 지정·운영 조례’에는 전통시장과 골목 상점가 1km 이내에 식자재마트 등의 진입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광주지역 유통업계의 한 관계자는 “주택가에 파고든 식자재마트가 가격, 우수한 접근성 등 경쟁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채소·과일 등 품목 개수 등을 비교하면 대형마트 수준에 버금가는 만큼 일부 규제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장휘국 교육감 ‘10·26 탕탕절’ 표현 논란

야당 등 반발에 게시글 삭제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이 자신의 SNS에 ‘10·26’을 ‘탕탕절’이라고 표현해 논란이 일고 있다.

28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장 교육감은 지난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은 탕탕절. 110년 전 안중근 의사가께서 일제 침략의 원흉 이토 히로부미를 격살한 날. 또 40년 전 김재규가 유신독재 심장 다카키 마사오를 쏜 날. 기억합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

다카키 마사오는 일본군 장교였던 박정희 전 대통령의 일본식 이름으로, 장 교육감이 말한 ‘탕탕절’은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퍼진 신조어다. 총을 쏘는 소리인 ‘탕탕’을 표현한 말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야권의 반발과 함께 온라인 상에서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날 광주시교육청 앞에는 한 유튜버가 찾아와 장 교육감의 표현을 비난하는 영상을 촬영하는가 하면, 자유한국당 장능

인 상근부대원인은 논평을 내고 “장 교육감은 박정희 대통령의 서거일을 총소리를 빚던 ‘탕탕절’로 부르며, 안중근 의사와 김재규 전 부장을 동일시하고 있다”며 “장 교육감의 심각한 왜곡된 역사 인식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재규를 안중근에, 박 전 대통령은 이토 히로부미에 비유하고 있다. 아무리 미워도 남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 장 교육감은 교육자 자격이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장휘국 교육감은 “역사교사 출신으로서 나라에 역사적 의미가 큰 날 항상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왔다”며 “‘탕탕절’이라는 표현은 인터넷에서 자주 사용돼 따라 썼을 뿐 별 다른 의미는 없었다”고 밝혔다.

장 교육감은 또 “박정희 전 대통령이 사망한 10·26 사태를 직접적으로 희화화할 생각도 결코 없었다”며 “다만 ‘탕탕절’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돼 당일 게시글을 삭제했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검찰, 광주 클럽 붕괴사고 업주 등 8명 기소

사망 2명 등 34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클럽 구조물 붕괴사고와 관련해 검찰이 클럽 업주 등 8명을 기소했다.

광주지검형사3부(부장검사 김훈영)는 28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건축법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업주 A(52)씨와 B(44)씨 등 2명을 구속기소 했다.

이들과 함께 클럽을 운영한 공동 업주와 운영자 등 2명과 클럽 내부 불법 증개축에 관여한 전 업주 2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건물 정기점검을 하지 않고도 제대로 한 것처럼 허위 보고서를 구청에 제출한 점검대행업체 관계자 2명도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이들은 불법 증축을 하고 안전요원도 배치하지 않아 지난 7월 27일 새벽 광주 서구 치평동 한 클럽에서 발생한 복층 구조물 붕괴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2명이 숨지고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참가한 외국인 선수 등 32명이 다쳤다.

검찰에 따르면 전 업주들이 1차로 불법 증축을 한 데 이어 현 업주들 역시 2차 증축 시 하부 기둥 없이 상판을 설치하고 하중을 견디기 힘든 얇은 두께의 자재를 불안전하게 용접했다. 검찰은 사건 당일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아 부실한 복층 구조물에 과다한 인원이 올라가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유충주 전 허가를 받지 않고 “객실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일반음식점으로 운영한 것도 불법이라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관련자들이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이 선고받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피해자와 유족들이 의료구조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에도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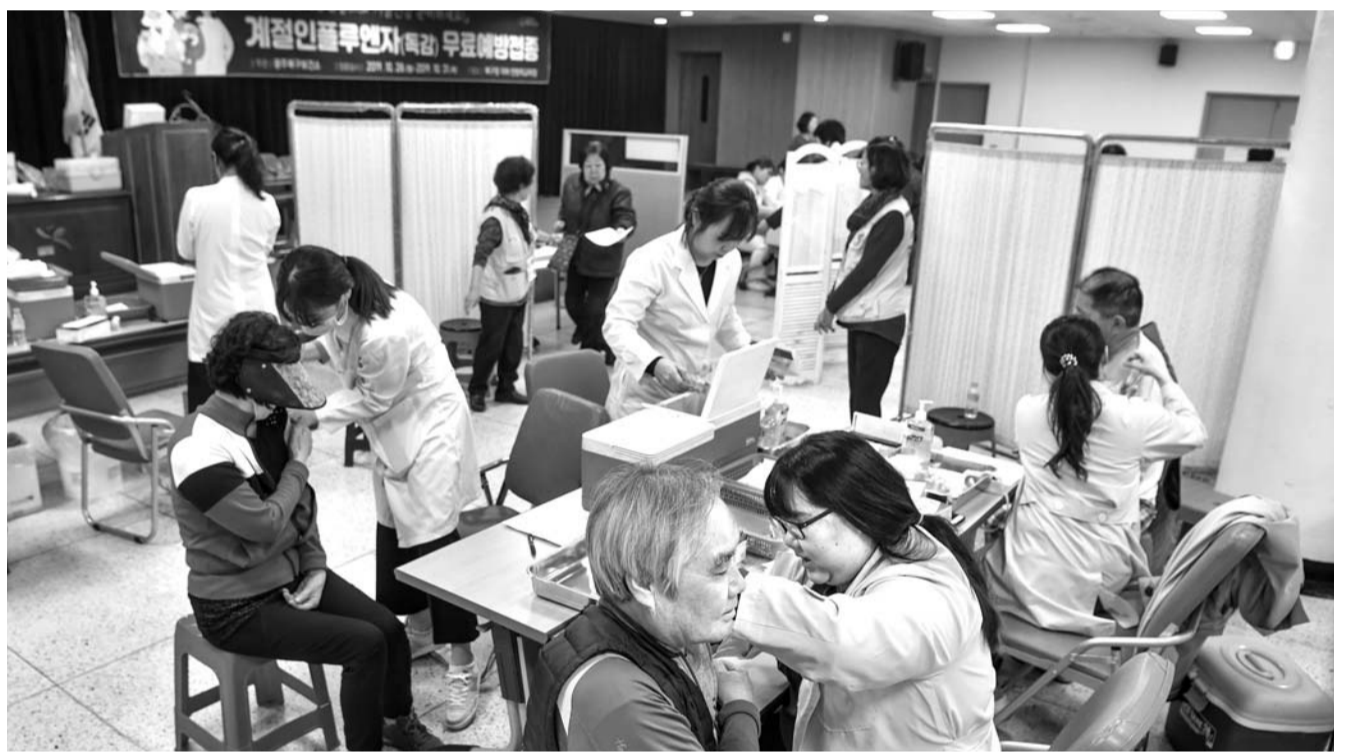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전남 불법 촬영 성범죄자 5년간 779명...여성도 23명

최근 5년간 광주·전남에서 발생한 불법촬영 성범죄자의 대부분은 남성이었지만, 여성도 23명이나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불법촬영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자는 광주 498명, 전남 281명으로 나타났다. 이중 광주는 남성이 485명, 여성이 13명이었으며, 전남은 남성이 271명, 여성 10명으로 집계됐다. 가해자 비율에서 남성이 각각 97%, 96%를 차지한 셈이다. 여성도 각각 3%와 4%가 포함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광주는 2014년 69명, 2015년 90명, 2016년 111명, 2017년 120명, 2018년 118명이었으며, 전남은 같은 기간 21명, 45명, 59명, 83명, 73명으로 집계됐다. /김민석 기자 mskim@



독감 예방접종 유공자와 의료급여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계절인플루엔자(독감) 예방접종이 실시된 28일 오전 광주 북구청 지하민방위교육장에서 대상자들이 보건소 직원으로부터 접종을 받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

광주서 올 첫 인플루엔자 검출

지난해보다 2주 빨라

광주에서 올해 처음으로 인플루엔자바이러스가 검출됐다.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은 10월 네째주 수집된 표본검체 34건 중 1건의 검체에서 인플루엔자바이러스 A/H3N2형이 검출됐다고 28일 밝혔다. 광주시 보건환경연

구는 질병관리본부와 함께 매주 광주지역 호흡기환자의 표본검체를 모니터링하는 ‘인플루엔자 및 급성호흡기바이러스 실험실감시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는 지난해 인플루엔자바이러스가 11월 초에 첫 검출된 것에 비해 2주 정도 일찍 확인된 것이라고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은 덧붙였다. 이번에 검출된 A/H3N2

형은 겨울철 국내에서 흔히 발견되는 유형이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독감을 일으키는 병원체다.

주로 환자의 기침이나 콧물 등 분비물을 통해 쉽게 감염이 되고, 1-4일 잠복기를 거쳐 38도 이상의 고열과 근육통 등의 증상을 보인다. 어린이와 노약자의 경우 폐렴과 같은 심각한 합병증으로 발전할 수 있어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은 개

인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고 인플루엔자 예방백신을 서둘러 접종할 것을 당부했다.

서진중 보건환경연구원 감염병조사과장은 “집단생활을 하는 영유아와 학생들은 감염 예방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기침이나 재채기가 나올 때는 고개를 돌리고 일회용 티슈를 대고 하거나, 팔꿈치 안쪽에 대고 하는 기침예절 지키기와 손 씻기 등 기본적인 개인위생수칙을 잘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레깅스 입은 여성 촬영 남성 무죄...재판부 이유는 “일상복”

○·버스 안에서 레깅스를 입은 여성의 하반신을 몰래 동영상 촬영한 남성이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 논란.

○·28일 의정부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오원찬)에 따르면 지난해 버스를 타고 가다 출입문 앞에 서 있는 여성 B씨의 엉덩이 부위 등 하반신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8초 가량 몰래 동영상 촬영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는 것.

○·앞서 1심 재판부는 벌금 70만원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24시간 이수를 선고했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레깅스는 운동복을 넘어 일상복으로 활용되고, 피해자 역시 이 같은 옷차림으로 대중교통에 탑승해 이동했다”면서 “레깅스를 입은 젊은 여성이라는 이유로 성적 욕망의 대상이라 할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

/연합뉴스

호남동 대원빌딩 총별 “특별분양”

높은 전용면적 75%
11,12층 천정고 6M
분양가 470만원 ~
환기 공조 시스템 완비
중앙 냉난방 시설완비
300대이상 주차공간

“추천업종”

- 1 **휘트니스센터,레저스포츠 시설**
- 2 **특급 한방병원,공공기관 사무실**
- 3 **일반/공유오피스 사무실**
- 4 **신협,새마을금고,저축은행**

분양문의 : (주)대원빌딩
062) 234-1233
위치 : 동구 천변우로 369 (호남동 23-2)